

社 說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우리 학교에서 전국대학민주동맹회, 한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주최로 열린 예정이던 '96 당당하게'라는 문화공연은 결국 경찰의 원천봉쇄로 학교밖 회기 거리에서 열렸다. 또한, 경기동부총련의 학생의 날 기념문화제에도 경찰의 불허로 원래 장소인 강남대에서 외대 용인캠퍼스로 옮겨 행사를 치뤄야 했다. 이렇게 학내에서의 집회와 행사를 불허하는 일들이 지난 '한총련 사건'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화공연까지도 가로막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음악을 연주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동이 사회의 공공안녕이라고 해칠 일이 될까.

집회를 막는 이유에 대해 경찰은 집회장소의 관리자가 사전승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아닌 학교안에서의 행사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라는데 너무 작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찰의 강제·해산 명령권의 신설과 집회신고제 집회장소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들이 들어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자유로운 집회의 보호보다는 그것을 제약하는데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강제해산권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시설주가 집회승인을 하거나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집회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학내에서는 어떠한 성격의 집회든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어쩌면, 정부에서는 집회나 데모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는 것이지만 문명정부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도 함께 눈 녹듯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명정부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그들이 곳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정부가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이룩된다면 그동안 흘려왔던 피가 너무 헛되지 않을까. 어느 시대이건 비판과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소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집회와 결사의 부자유에 대해 개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총장 선출 논의 활성화 돼야

총장직선제 시행을 둘러싼 학내 제단체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12월에 있을 신입총장선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학원계민주단체인협의회(경민협)가 교수,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교수협의회가 이에 맞서 재단임명 방식 교수의 의사를 배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경민협이나 교수협의회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 모두의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총장선출 과정상의 논의에서 기존의 형식은 분명히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과정상의 결과가 어떠한지 전체 구성원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학내 중요 사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형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사결정과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의사수렴 과정상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우리학교의 총장을 원활하게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변인이어서는 안된다. 학내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도덕성 앞지른 경제 대변혁 논리의 승리

클린턴 재선과 국제정세 동향과 전망

세 력

강 랑

(공보처 해외공보관)

5일 펼쳐진 미 대선결과 클린턴은 50%이상의 득표로 루즈벨트 이후 52년이란 긴 세월 이후 최초의 민주당 재선대통령이 되었다. 대부분의 미언론들은 클린턴의 재선이 다분히 미국경제의 상승세, 국내범죄율의 감소, 국제사회의 평화무드 등의 운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의 언론들은 이번 대선에서 미 유권자들이 클린턴의 재선과 공화당주도의 의회를 선택함으로써, 이념보다는 경제와 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권한을 한 정당에 맡기지 않았음을 칭찬하고 있다. 미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클린턴의 창조적 개혁정신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비전이 그의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서 보여진 것이다. 유럽계국들은 이런 클린턴의 일관된 신념을 받아들여 유럽통합문제를 놓고 긴축예산과 국가별 무역수지 개선에만 매달려 있는 유럽국들의 소극적인 경제정책과 실패한 복지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밤 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클린턴이 재선되는 것이 훨씬 이로운 점이 많다.

첫째로 안보면에서 밤 돌이 제시한 NATO개혁안은 NATO의 급진적인 확장과 미국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는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고 지나친 미국위주의 통상정책은 유럽국과의 통상마찰을 더욱 확대시킬

일본, 미압력으로 우방국가 단절 우려
한미 통상 마찰 남북문제 악화될 듯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엘리트의 건강악화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한 러시아로서는 미국내 보수·공화정권의 탄생을 통한 강경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럽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중동평화문제도 클린턴이 주장해 왔던 화해와 타협의 원칙이 계속 추진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유럽은 클린턴의 재선을 두둔하고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언론들은 구미쪽의 언론동향과는 대조적으로 클린턴의 재선에 대해 냉담하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안보면에서 클린턴은 계속 일본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나아가 동아시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안보적 역할을 해줄 것을 협약하는 신안보조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일본에게 강요할 것이

분명하며, 거품경제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경제에 대해 조급의 양보도 없는 미국의 대일통상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총선결과 자민당의 약진과 일본경제의 전반적인 보수·우익화 성향을 이용해 미국은 틀림없이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촉구할 것이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영토영유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우방인 한국과 경제세력인 중국의 반감을 사, 이들 국가와의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도 클린턴의 재선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94년 제네바 미·북핵합의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미국의 대북 적극적 개입정책(positive engagement policy)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사건과 맞물려 적지않은 한·미간 불협화음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북한의 잠수함도발사건이후 한국이 요구한 한·미간 대북 강경공조체제도 걸음으로 한국에게 동조하는 듯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접촉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네바회담 결과와 관련된 법적인 명분을 앞세우는 미국의 대북접촉은 막기가 힘들다. 특히 북한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국정부의 위상은 북한의 공식성명도 없이 리처드슨의원의 방북이 성사되면 그야말로 먼저 미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정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대한 대가로 지난날 전면적으

로 연기발표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일환인 부지조사단 파견을 조기에 성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재선된 클린턴의 경제적 야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대통령으로서 재선의 영광을 안은 클린턴은 임기 마지막에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또는 남북한 통일 완성 등으로 노벨평화상을 타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클린턴은 짐짓 무모한 남북한 관계정상화와 관계증진을 도모할지도 모르며 이런 미국의 태도를 북한이 심본이용해 대남 강경자세로 일관할수도 있음을 한국은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한국이 클린턴의 재선으로 당면해야 할 또다른 벽은 역시 한·미간의 통상문제이다.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대미 무역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OECD가입 후 추진될 개방과 관련해 더 많은 통상압력을 가해 올 것이 분명하다.

인권문제와 저작권문제, 지상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대한 반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미·중관계는 미국의 경제적 실리라는 차원에서 건설적인 이익을 본안으로 일관될 것이다. 과거 미·중간 마찰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국가들은 일본과 독일이기때문에 더 이상 미국도 명분에 의존하는 인권, 환경,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지난번 대만에 대한 위협처럼 지역 군사대국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 하려할때에는 전과 같은 강경한 견제를 감행할 것이지만 중국이 또다시 실리에 부합되지 않는 군사적 위협을 감행할 가능성은 적다.

'한-일 월드컵' 홍보 중요하다

결승전 일본서 개최...한국의 지속적 노력 필요

PC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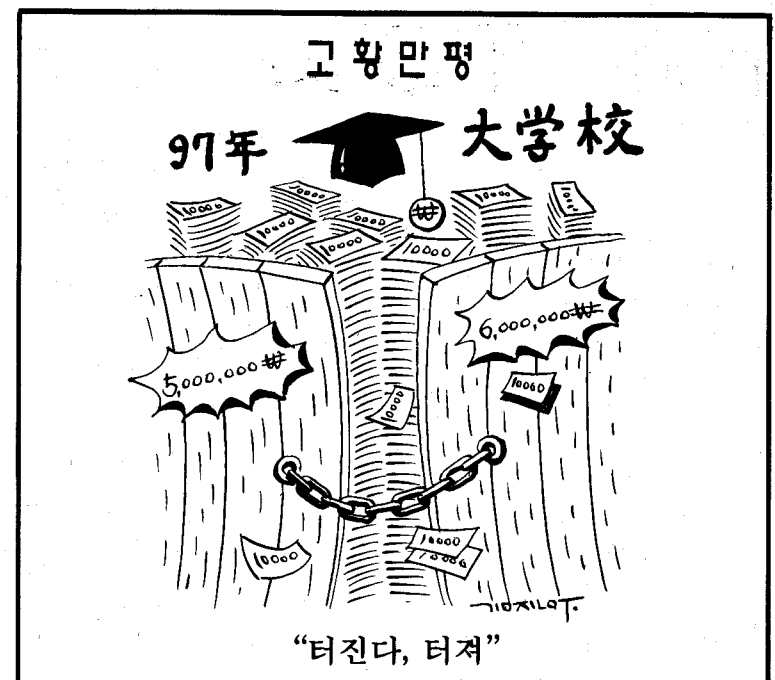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식은 우리나라, 결승전은 일본에서 개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개막식 개최권 외에 국제축구연맹(FIFA)총회 개최권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대회명칭을 확보했다. 그러나 결승전을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하이텔 게시판에 '2002년 월드컵 결승전 개최'에 대한 글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월드컵을 통해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와 외화획득 등의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월드컵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월드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결승전이기에 애초에 기대했던 그러한 효과는 상당히 낮아지고 지금까지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제되었다.(ID: izys, avicom) 또한 월드컵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뎠던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유럽

지역에선 2002년 월드컵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승전까지 일본에서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개최에 있어서 일본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ID: shinkis)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에 스타나 주전선수가 부상, 반칙 등의 이유로 흥미가 반감되거나 우승후보국가가 결승진출에 탈락하는 일이 있어서 결승전에 대한 이목집중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결승전 개최는 배아졌다고 해도 아직 남은 6년 동안 '한-일 월드컵'이라는 정식명칭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면 결승전 개최보다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ID: joopce)

이미 결정된 결승전 개최권은 바꿀 수 없기에 반감을 가지고 한탄하기 보단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 기대를 걸고 홍보에 더욱 열중해야 된다는 의견은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동욱 기자>

미래가 있는 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축자재, 도로, 건설에서
신소재 분야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젊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관리	상경, 법정, 어문, 기타인문		1.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업	사회계열 전학과		2.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7년 2월 취득 예정자
연구	화학, 화공, 고분자, 공업화학, 건축, 토목, 기계, 전기	100명	3. 외국어 대학 및 대학원 출신자 (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술	무기재료(상기관련학과포함)		4. 병역청 또는 면제자
영업	전자계산, 통계, 수학		5.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전산	디자인관련학과		6. 환경관리(가) 및 산업건설안전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2차: 필기시험
과목: TOEIC, 직무능력 및 적성
다. 3차: 면접 및 신체검사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대학학원 성적증명서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다.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라. 국가보훈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6년 11월 8일(금) ~ 11월 15일(금) 09:00~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KCC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450-5131~7, 5620~4
부산	부산 영업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69-1	512-3211~5
대구	대구 영업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371-214-25	252-4321~4
울산	울산 영업소	경남 울산시 중구 영포동 777	80-1717
전주	전주 영업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0	261-0120
광주	광주 영업소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96-2	943-8211~6
창주	창주 영업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옥암동 823	211-9277~9
대전	대전 영업소	충남 대전시 대덕구 연동동 230	635-4322~8
원주	원주 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	44-6821

다. 접수처: KCC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1301-4 금강·고려 B/D(우편번호:137-703)

전화: 3450-5131~7, 5620~4, 5512~15

위치: 서울시 서초구 제일생명 뒤(지하철2호선 강남역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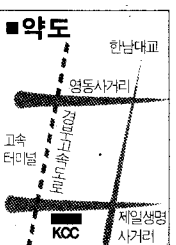
5.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현역 복무중인자는 96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람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